

〈200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 ① 소비자 대형유통업체 확산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산지에 규모화되고 전문화된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한다.
 - 시군 유통회사는 농어업인, 시군 등의 출자를 통해 설립되며, 기업적 경영방식을 갖춘 전문 CEO에 의해 경영되는 농수산물 판매전문 회사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2008년 12월 24일 시군 유통회사 설립을 지원할 사업대상자 6개 군을 확정·발표하였으며, 회사 설립 후 운영자금, 원물확보자금 저리융자, 법인 및 CEO 선정 지원, 직원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른다.
 - * 사업대상자(6개) : 보은, 고흥, 화순, 원도, 의령, 합천
- ② 대규모 농어업회사에 간척지를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08.12.3)하는 등 농림수산식품의 수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 공로를 통해 대규모 농어업회사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간척지 장기임대,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인 사업시행방안이 마련된다.
- ③ 젊은 인력이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11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50~300세대 규모의 농어촌 뉴타운이 시범적으로 5개소 조성된다.
 - 기숙형 공립고와 연계한 교육여건 개선, 생활 편의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구비된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④ 전국의 모든 소를 대상으로 한 이력추적제가 '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어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질병이나 위생·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여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2009년 6월 22일부터는 귀표가 부착되지 않은 소는 도축이 금지된다.
- ⑤ 축산발전기금의 용자 취급기관을 농협 및 일반 은행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하여 농어업인들이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양계업과 오리사육업의 축산업 등록대상을 사육시설 면적 3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 축산업 등록기준에 종오리업을 신설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상시 방역체계 구축 및 사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
- ⑥ 도매시장 농수산물 출하자 신고를 의무화하고,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의무화하여 유통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안전한 농수산물 구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 ⑦ 그간 세분화된 양식물별 면허를 양식방법이 같으면서 서식환경이 비슷한 수하식은 파래와 매생이를, 바다식은 백합·고막·가무락 등을, 축제식은 어류·갑각류·해삼을 통합하여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미더덕류에 대한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재해발생시 보상처리를 위한 재해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미더덕류 양식시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한우값 수입산의 2.5배로 낮춘다”

정부는 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입 쇠고기보다 3배가량 비싼 한우의 가격을 2.5배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농림수산물부는 한우산업 발전 대책을 발표하고 한우 가격의 안정을 위해 경기에 따라 140만~290만 마리로 변동 폭이 컸던 사육 두수를 200만~280만 마리 범위에서 관리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율도 40~6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길 농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품질은 높이고 생산비용은 줄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우 농가를 조직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육우도 품질 장려금 지원

정부가 육우(고기소) 및 육우 송아지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낙농육우 농가를 위해 내년부터 축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을 육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12월 24일 농림수산물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육우와 육우 송아지 값이 폭락해 낙농육우 농가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육우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우와 돼지고기에 대해서만 벌여오던 브랜드 육성 사업을 내년부터 육우로 확대해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브랜드 판매점 설치도 돕는다.

최근 농협과 함께 내놓은 ‘목우촌 육우’ 브랜드

도 앞으로 하나로마트 등에서 취급하도록 해 육우 판매를 장려할 계획이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역 축협에만 제 공하려던 이동판매차량(냉동탑차) 자금도 낙농조합 등으로 확대한다. 냉동탑차는 고기를 싣고 다니며 직접 소비자에게 팔 수 있는 장비로, 육우 고기도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부터 육우에도 축산물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한다. 1등급에는 10만원, 1+등급 이상에는 20만원이 지원된다. 이는 한우에 대한 지원 기준(1+등급 이상) 보다 범위가 더 넓은 것이다.

농협 중앙회장 인사권 없앤다

농협 개혁의 밑그림이 지난 12월 22일 농림수산물부 장관 업무보고를 통해 드러났다.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농협개혁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농협을 개혁의 수술대에 올려놓았지만 어떻게 개편할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초점은 농협 권력 구도의 정점에 있는 중앙회장의 권한을 줄이는 데 맞춰지고 있다. 농협이 과거 대형 비리에 취약했던 이유가 제왕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회장을 견제·감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농협 중앙본부 20% 이상 슬림화하는 등 구조조정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데 이번 농협 개혁의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중에 농

협 지배구조 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협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달 3일까지 개혁방안을 확정, 2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회장의 막강한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회장이 갖고 있는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 등의 인사추천권을 없애 명실상부한 '명예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2005년 농협법 개정으로 회장의 법적 지위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격하됐고 현재 남아있는 권한은 전무이사, 사업대표이사, 사외이사 등의 추천·임명권 정도다. 하지만 회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다보니 경영권에 간섭해도 견제할 사람이 없고 권한도 집중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농협 중앙회장의 힘을 빼는 대신 경제·신용·교육 등 각 사업부문의 대표이사 책임 경영 체제를 갖추고, 이사회가 경영 성과를 평가·감독하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회장을 뽑는 선거제도도 손볼 방침이다. 현재 일선조합당 규모에 상관없이 1표씩 행사하도록 돼 있지만, 조합원수에 따라 1~3표씩 차등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간선제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학교 우유급식 차상위계층 공급위한 추가예산 확보 무산

학교 우유급식 확대 계획이 예산확보 실패로 결국 무산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월 16일 2009년도 농식품부 예산으로 확정된 14조5,000억원 가운데 학교 우유급식 예산은 당초 정부안대

로 215억9,900만원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가 2009년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차상위계층 13만1,000명과 증가된 저소득층 학생 7만4,000명에 대해 200㎖ 기준 330원씩 연간 250일 공급이 가능토록 각각 75억6,525만원과 42억7,350만원 등 118억3,875만원을 추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국회 농식품위가 무상 우유급식 대상으로 추가하려던 차상위계층과 증가된 저소득층 학생 20만5,000여명은 내년에도 우유 무상급식에서 제외된다.

배정식 낙농육우협회지도부장은 "국회 농식품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결특위에서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안대로 처리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우유급식 확대는 낙농산업 발전보다도 궁극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과 영양이 더 큰 목적이라는 것을 국회와 정치권이 제대로 인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출처 : 축산신문, 농수축산신문, 농민신문, 농어민신문, 축산경제신문 등)

